

민 법

[친족상속법 제외]

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

1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.
-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.
- ③ 온전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다.
-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
2. 실종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.
-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「민법」 제27조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룰 수 없다.
- ③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- ④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 후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 불명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민법」 제27조제2항의 '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'이라고 할 수 있다.

3. 채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특정물채권의 경우, 목적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.
- ②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- ③ 선택채권의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.
- ④ 선택채권의 경우, 선택권이 행사되면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발생한다.

4.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물권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.
-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.
- ③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,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.
-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.

5.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.
- ②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,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.
- ③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.
- ④ 금전소비대차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.

6.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.
-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.
- ③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인을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, 당사자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.
- ④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
7.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.
- ②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,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면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.
- ③ 채권자는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.
- ④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,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 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.

8.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②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있어서,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,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시기(始期)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④ 기한부채권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.

9.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전세권자의 사용·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.
- ②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,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므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- ④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적 권능이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 인도 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 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 절차 청구를 할 수 있다.

10. 선의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'점유의 취득'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.
- ②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있다.
- ③ 선의취득의 요건 중 선의·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건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건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.
- ④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,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.

11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②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④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,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12. 보증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이므로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.
- ② 보증은 그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.
-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는 경우, 보증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④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연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이유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.

13.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,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.
- ②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.
- ③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.

14. 2025. 3. 25. 甲(당시 18세 3개월)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2025. 4. 1.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② 2025. 5. 9. 丙이 甲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,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.
- ③ 2025. 6. 15. 甲이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더라도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2026. 7. 13. 甲이 이익을 보류하지 않고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, 甲은 매매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본다.

15. 복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- ② 대리권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.
-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.
- ④ 복대리인의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「민법」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
16. 甲은 건축업자 乙과 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乙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, 甲과 乙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, 일단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.
- ②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, 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.
- ③ 乙이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된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한 경우, 甲과 乙 사이에는 법정 저당권이 성립한다.
- ④ 乙이 건물을 완성하여 甲에게 인도한 경우, 甲은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,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.

17. 피성년후견인인 甲이 저당권이 설정된 그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X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, 乙은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甲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, 甲은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- ③ 甲이 乙의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, 乙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④ 乙이 X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.

18.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하였다. 乙은 甲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한 채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X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乙은 甲 명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X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② 乙의 丙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면 甲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.
- ④ 甲이 X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19. 甲, 乙, 丙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, 甲, 乙, 丙의 지분은 각 3/5, 1/5, 1/5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이 乙,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, 丙은 甲에 대하여 X 토지의 1/5의 한도에서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甲이 乙,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, 丁은 乙, 丙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.
- ③ 乙이 甲,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, 丙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X 토지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甲이 乙,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, 乙과 丙은 공동으로 하더라도 丁에 대하여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.

20. 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.
- ㄴ. 사단법인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정관으로 평등하지 않게 정할 수 있다.
- ㄷ.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의 경우,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ㄹ.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21.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 토지 및 丙 소유의 Y 토지에 각 1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그 후 X 토지에는 丁의 2순위저당권을, Y 토지에는 戊의 2순위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X 토지와 Y 토지가 함께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,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乙에게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때에 한하여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乙에게 배당한다.
- ②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, 丁은 乙을 대위하여 Y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③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, 丙은 乙의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, 戊는 丙이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.
- ④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,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해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22. 허위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등기를 위하여 체결한 전세권 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.
- ㄴ.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 목적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, 그 가등기에 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약정은 허위표시이다.
- ㄷ. 甲이 X 토지의 매수자금을 乙로부터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乙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후, 甲의 다른 채권자들이 X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우려하여 X 토지를 丙에게 가장양도하고 丙이 乙에게 가등기를 한 경우, 乙은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ㄷ

23.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.
- ②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,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「민법」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다.
-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,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.
- ④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24. 이행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가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.
-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,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지체가 된다.
- ③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④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,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.

25. 甲, 乙, 丙이 丁에게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이 丁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, 그러한 사유가 없는 乙도 丁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.
- ② 乙이 丁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 甲, 丙을 면책시킨 경우, 구상권자인 乙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甲, 丙의 乙에 대한 구상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.
- ③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甲이 丁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, 甲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甲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甲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,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乙, 丙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.